

고용노동부는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 등 다양한 회의체를 통해 현장일자리 상황 파악·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

1. 관련 기사

□ 6. 14.(일) 헤럴드경제, ‘매월 연다던 일자리 TF, 5월에야 첫 회의’

- 고용시장 상황을 상시 점검하기 위해 만든 범정부 일자리 전담반(TF)의 존재감도 예전만 못했다. (중략)
- 정부 회의의 무게는 누가 참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. 그런 점에서 지난해 11월 일자리TF가 사실상 실장급 회의로 운영된 장면은 상징적이다. 고용 컨트롤타워의 존재감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의미로 읽혔다. (중략)
- 올해 첫 일자리TF 회의는 5월 13일에서야 열렸다. 출범 당시 내세웠던 ‘매월 개최’ 원칙과 비교하면 개최 주기가 눈에 띄게 느슨해졌다.

2. 설명 내용

□ 고용노동부는 ‘일자리 전담반’을 포함하여 다양한 회의체를 통해 고용 상황 대응에 지속 힘쓰고 있음

- 매월 고용동향 발표일에는 주기적으로 ‘고용상황 점검회의’를 개최하고,
* '25.8.13., '25.9.10., '25.10.16., '26.1.15. 등
- 분기별로 노동연구원, 한국은행, KDI 등 전문가와 함께 ‘고용동향 점검 회의’를 개최하여 고용 상황의 시사점과 리스크를 점검해왔으며,
* '25.9.29., '25.12.22., '26.5.7. 등

- 상황에 따라 범정부 협의가 필요한 안건은 비상경제장관회의 등 범정부 회의체를 통해 논의를 지속함

* '25.12.18. 과기관계장관회의에서 '노동시장 AI 인재양성방안' 발표
 '26.3.11.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'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현황 및 향후계획' 논의
 '26.4.29. '2026 대한민국 상생 채용박람회' 현장에서 「민관합동 청년뉴딜 보고회」 개최

- 특히, 중동전쟁 이후에는 매주 장관 주재 비상고용노동점검회의를 개최하여 7개 지방청을 포함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 중에 있고,

- 화학·철강업, 항공·관광업, 플라스틱·섬유제조업 등 여건이 어려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*,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선정** 등 고용안정 조치를 시행하였으며,

* ▲ 석유 수급 상황과 밀접한 4개 업종은 매출액 감소 요건이 미충족해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
 ▲ 종래 사업장 전체에 대한 고용유지 조치만 지원→ 일부 직원·부서 고용유지 조치도 지원

** 현재 7개 지역 지정 중: 전남 여수·광주·광산구('25.8.28~), 경북 포항·충남 서산('25.11.21~), 울산 남구('26.1.12~), 전남 광양('26.2.13~), 인천 동구('26.4.16~)

- 지방고용상황점검회의 등을 통해 피해우려 업종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'버팀이음 프로젝트' 추경 예산(120억)을 긴급 편성·지원 중에 있음

-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'일자리 전담반' 등을 통해 현장의 고용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서 지원하겠습니다

담당 부서	노동시장정책관 고용정책총괄과	책임자	과 장	이상임 (044-202-7210)
		담당자	서기관	김철수 (044-202-7212)